2020년 군무원 행정학 7급 (2020.7.18.)

• 해설 : 이승철

국회직8급 시험에 도전장을 던지는군요.

01 지방재정의 사전예산관리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
② 지방재정투융자심사
③ 성별영향평가제도
④ 지방채 발행

해설

①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표현에 '사전'이란 용어가 들어있지만 지방재정법 상(55조의2~56조) 재정위기단체 지정 관련 세부절차, 재정위기단체의 재정상 의무와 불이익 부여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다. 즉 재정분석·재정진단 결과 이미 재정위험이 나타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더 심화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통제방식으로는 사후통제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 재정투융자심사는 현재 '재정투자'심사로 명칭이 바뀌어 있음-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일정 재정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임.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③ (○) 현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함)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다. 성인지예산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④ (△)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나, 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시 협의 또는 승인제, 외채발행시 승인제 등으로 표시해야 사전관리제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사전통제	• 지방재정영향평가(지방재정법 27조의6)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지방재정법 33조) • 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 재정운용업무편람과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 재정지원사업 사전협의(국가재정법 7조10항) •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 성인지예산(지방재정법 36조의2)
사후통제	• 재정보고서 제출(지방재정법 54조) • 예산 및 결산의 보고(지방자치법 133·134조)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지방재정법 55조) •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지방재정법 55조의2~56조) •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조)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지방재정법 60조의3~60조의9)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제출(지방재정법 59조) • 재정벌칙제 -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지방교부세법 11조)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반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0조) • 행정사무 감사·조사(지방자치법 41조) • 성인지결산(지방회계법 18조)

답 ①

02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르면?

㉠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수 있다.
㉡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 전자감시의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 정보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 (×) 정보기술의 발달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극복되고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전자공간(cyber space)을 활용하여 전자거버넌스가 구성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가 실현될 수 있다.
㉡ (○) 전자상거래 사기, 해킹, 도박사이트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될 수 있다.
㉢ (○) 통제·감시 사회와 인간소외·비인간화 : 개인정보가 일괄 수집·관리되어 통제되고 전자감시(electronic panopticon)체제가 확대되면서 인권침해나 인간소외·비인간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파놉티콘(panopticon) : 벤담(J. Bentham)이 제안한 것으로 소수의 감독자가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모든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 파놉티콘의 개념은 전 사회적으로 확장된 감시국가를 묘사하면서, 절대권력을 가진 통치자 '빅브라더'가 첨단감시장치와 권력을 동원해 사람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는 가상국가로 묘사한 조지 오웰의 소설「1984년」에서 더욱 극대화되었다.
㉣ (○) 정보불균형과 정보격차(Digital Divide) : 정보 격차는 교육, 소득수준, 성별, 지역(예 도시 대 농어촌) 등의 차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차별되고 그 결과 경제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현상.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정보의 마타이 효과(matthew effect)라고 함.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따른 불평등의 결과가 단순한 정보격차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됨. 정보격차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보리터러시 정책과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요구됨.

답 ④

03 윌리엄스와 앤더슨(Williams & Anderson)에 의해 주장되는 조직에 대한 조직시민행동(OCB-O)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② 성실행동(conscientiousness)
③ 시민의식행동(civic virtue)
④ 이타적 행동(altruism)

해설

④ (×) 이타적 행동은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OCB-I)
•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OCB-I) : 동료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타적 행동, 대면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의성과 관련
• 조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OCB-O) : 조직을 위한 차원에서 동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양심적 행동, 스포츠맨십, 시민행동과 관련

답 ④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1. 의의
공식적인 담당 업무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상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과적 운영을 촉진시키는 각 조직구성원의 재량적(자발적)인 지원행동. 과업성과에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맥락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조직구성원의 기여(contribution). 규범을 강조하는 내적인 통제를 통한 동기부여 방법.

2. 조직시민행동의 5가지 하위 차원
• 개인 차원의 조직시민행동(OCB-I) : 동료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타적 행동, 대면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의성과 관련
• 조직 차원의 조직시민행동(OCB-O) : 조직을 위한 차원에서 동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양심적 행동, 스포츠맨십, 시민행동과 관련

개인 차원	이타적 행동(altruism)	조직 내 과업이나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구성원을 도와주는 행위. 대상은 조직 내부 구성원이지만 외부인도 조직의 과업과 연관되면 이에 해당.	예 신입사원이 잘 적응하도록 돕기, 아픈 동료 돕기
	예의성(문제예방적 행동)(courtesy)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배려.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과 사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필요한 양해를 구하고 의견 조율.	예 정보공유, 사전협의
조직 차원	양심적 행동(성실성)(conscientiousness)	조직 내 구성원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저수준 이상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 자신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명시적·암묵적 규칙을 충실히 준행(遵行)	예 조기출근, 회사비품 아껴쓰기, 작업장주변 정돈
	스포츠맨십(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조직 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비난을 삼가하고 고충을 인내하며 묵묵히 직무를 수행. 조직이나 다른 구성원과 관련하여 불만·불평이 생겼을 경우 뒤에서 험담하고 소문내기보다 긍정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행동.	예 불평·불만 자재, 험담하지 않기
	시민정신(공익성)(civic virtue)	구성원이 조직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 태도로 참여하는 것.	예 조직의 정책에 대한 관심·제안, 관련 이슈 토론

3.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① **조직공정성** :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조직 내의 공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신이 조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조직 내에서 자발적으로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분배의 공정성(결과)보다 절차의 공정성(과정)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침.
② **직무 만족** :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과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만족할수록, 구성원이 조직 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③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 : 정서적 몰입은 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에 헌신하겠다는 심리적 상태. 조직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자신의 조직과 일에 대해 몰입하고 있을수록 조직시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④ **상사와의 관계** : 조직 구성원이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각할 때나, 상사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시민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⑤ **전염성** : 집단 구성원들이 대체로 조직 시민 행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직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⑥ **개인의 성격** : 조직시민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감, 외향성, 긍정 정서 및 이타주의 요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로 나타남.
⑦ **역할명확성** : 구성원들이 자신을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조직시민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04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보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③ 시보기간 중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① (×) 시보기간이 종료되면 임명과 초임보직이 이루어진다. 임명은 정규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것이고 보직은 특정한 직위에 배치되는 것이다. 보직을 받지 못했었도 임명이 된 경우 정규공무원 신분이 부여된다.
② (○)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도 적용되며 전보도 가능하다.
③ (×) 파면·해임된 경우 재임용제한기간이 있으나 직권면직된 경우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
④ (×) 시보기간 동안 신분보장이 제한되지만, **시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이 된다.**
cf) 반면,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계산되지 않음.

답 ②

05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배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재분배정책은 형평성을 추구한다.
② 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높은 반면에 재분배정책은 정책순응도가 낮다.
③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비용부담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이 비용 부담자이다.
④ 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이다.

해설

④ (×) 분배정책은 관료나 하위정부가 주요행위자라면 재분배정책은 대통령이 주요행위자이다. 재분배정책의 결정은 엘리트들의 제휴(association)에 의해 이뤄지므로 엘리트론적 정치가 강하게 나타난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대통령과 공공의 관심이 덜하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정책결정 과정(특히 배분정책)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며 관료는 특수 이익집단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 T. Lowi의 정책유형 간 비교

구 분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수혜자	주로 특정(특정 개인·기업)	주로 불특정(일반 국민)	특정(저소득층)
비용 부담자	불특정(일반국민의 세금)	주로 특정(특정 개인·기업)	특정(고소득층)
갈등·대립·저항	약함	심함	아주 심함
집행 난이도	집행 용이(비용부담자의 저항 약함)	집행 곤란	가장 집행 곤란
특 성	개별적·분할적 비영합게임(non zero-sum game)	개별적·비분할적 공권력, 법률 형태	광범위가치 이전 영합게임(zero-sum game)
기본 정치단위	개인, 회사(firm), 법인(corporation)	이익집단(group)	제휴·연합(association)
상호관계 유형	상호불간섭·상호수용 pork barrel politics, log-rolling	다원주의 연합(coalition)·타협·협상	엘리트주의, 정상 간 제휴(association) 계급 대립, 이데올로기적 성격
권력구조	비대립적 엘리트 및 지지집단	다원적 집단 간 균형	대립적 엘리트
	권력구조는 안정적임	권력구조는 불안정적임	권력구조는 안정적임

답 ④

06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② 집합적이고 공유된 공익개념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④ 관료 역할의 중요성은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해설

④ (×) 관료의 역할을 방향키보다는 public service(시민 지원).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방향은 주인인 시민이 잡고, 관료는 그것을 지원)

답 ④

신공공서비스론의 7가지 원칙 - 7가지 기본원칙(R. Denhardt와 J. Denhardt)

① **행정의 역할은 방향잡기(조정) 보다는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Serve, rather than steer) : 정부역할은 규칙제정 같은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봉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정부는 정책과정에서 의제설정, 관련 당사자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타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정책에 대한 시각** : 정책은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므로 정부는 사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행위자에 불과하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감내할 필요는 없음.
   ㉡ **관료역할 - 봉사(service)** : 관료의 역할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관련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촉진하며 시민과 지역공동체 간 이익을 중재하고 협상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해야 함. 따라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부 규모의 일방적 축소를 지양(止揚)함.

②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적**(The public interest is the aim, not the by-product). 공익은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공익에 대한 담론 중시) : 물. 행정인은 공익에 대해 집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개념을 구축하여 개인적 선택에 의한 빠른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이해와 책임을 창조해야 함. 관료는 시민들이 담론을 통해 공동가치를 표현하고 공익에 대한 집단적 의미로 발전시키는 공적 에너지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함.

③ **행정의 활동방식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Think strategically, act democratically) : 정부는 지역공동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성을 다하도록 지원적·조장적 역할 수행.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합심·협력하게 하려면 전략적 사고에 의한 계획과 민주적 실천 필요.

④ **봉사대상은 시민 : 행정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Serve citizens, not customers). 공무원은 고객이라는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손님의 요구에 단순히 반응하기 보다는 시민 사이의 믿음·협동관계를 구축해야 함. 정부는 직접적인 고객(구매력을 가진 자) 이외의 사람들(약자)에게도 봉사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요청을 져버려서는 안 됨.

⑤ **책임의 다원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음**(Accountability isn't simple) : 정부책임의 범위는 단순히 시장지향적·성과지향적인 이윤 추구·달성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 공동체가치, 정치규범,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이러한 다면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독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시민참여와 토론을 거쳐야 함.

⑥ **생산성(능률성)보다는 인간적 가치(민주성) 중시**(Value people, not just productivity). 생산성 개선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통한 관리를 강조. 공공조직이나 공공조직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는 인간존중에 바탕을 둔 **공유된 리더십**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음.

⑦ **기업가 정신보다는 citizenship(시민정신·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의 가치 중시**(Value citizenship and public service above entrepreneurship) : 공익은 공공자금을 그들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는 기업가적 관료에 의해 확보되기보다는 사회에 대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시민과 관료들에 의해 더 잘 증진될 수 있음. 공무원은 거버넌스 과정의 책임 있는 참여자이지 단순한 기업가가 아님. 공무원은 공적자금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유지자, 시민정신과 민주적 담론의 촉진자, 공동체가 성립되게 하는 촉진자, 일선업무의 지도자(street-level leader ; 길바닥 수준의 리더, 시민에 근접한 일선의 리더)로서 역할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할 책임을 짐.

07 켈리(Kelly)의 귀인이론에서 주장되는 귀인의 성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달리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외적 요소에 귀인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③ 개인이 다른 사건에서 미래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④ 개인이 동일한 사건에서 과거와 동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높다면, 그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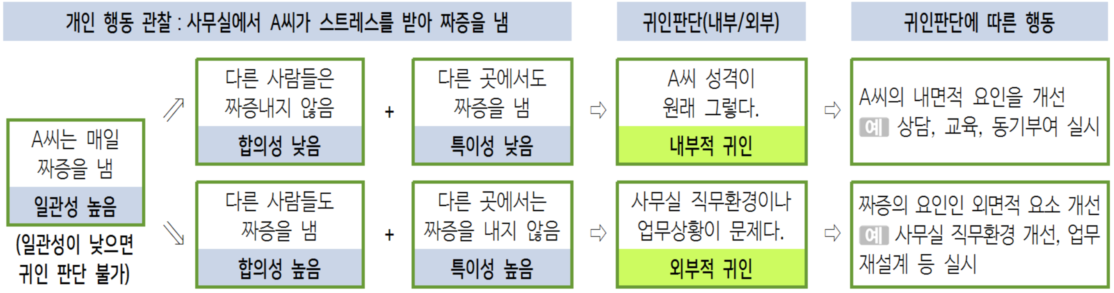
해설

① (○) **합의성(일치성 : consensus)**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 -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성 분석(타인과 비교) 합의성이 높다면 내적 요소보다는 외적 요소에 귀인(행동의 원인 판단)하려함.
② (○) **특이성(구별성 : distinctiveness)** : 이 사람의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특이한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가?) - 그 상황에서의 행동의 특이성 분석(다른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교). 특이성이 높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내적 요소보다 외적 요소에 귀인하려 함
③ (×) 틀린 지문으로 일부러 만든 것으로 보임. 합의성·특이성·일관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이 아님. 만약 일관성이 높고 특이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면 내적 귀인으로도 연결은 될 수 있다.
④ (△) **일관성(동일성 : consistency)** : 이 사람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였는가? - 행동 또는 결과의 일관성·동일성 분석(과거와 비교). 일관성이 높은 경우 내적 요소에 귀인하려한다는 것은 켈리가 종전이론에서 주장한 내용(이후 수정된 이론에서는 일관성이 낮으면 귀인판단이 곤란하고 일관성이 높음을 전제로 하여 특이성·합의성을 통해 귀인판단).

답 ③

켈리(H. Kelley)의 귀인(歸因)이론(Attribution Theory)

① **의의** : 사람들이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이론. 귀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
② **귀인 분석** : 개인의 행동 관찰시 행동의 원인이 내적 요인(개인의 능력·동기·경험·기술 등)인지 외적 요인(업무특성, 상급자의 특성, 직무환경, 운)인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차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귀인판단을 내림.
㉠ **합의성(일치성 : consensus)** :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 -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성 분석(타인과 비교)
㉡ **일관성(동일성 : consistency)** : 이 사람은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였는가? - 행동 또는 결과의 일관성·동일성 분석(과거와 비교)
㉢ **특이성(구별성 : distinctiveness)** : 이 사람의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만 특이한가?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가?) - 그 상황에서의 행동의 특이성 분석(다른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교)
③ **귀인판단과 행동**(Kelley. 1973) : 일관성이 낮으면 신뢰할만한 귀인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일관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의성·특이성이 모두 낮으면 내부 귀인, 모두 높으면 외부 귀인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행동을 함.



• Kelley의 종래 이론에서는 일관성이 낮고 합의성·특이성이 높으면 외부 귀인으로, 일관성이 높고 합의성·특이성이 낮으면 내부 귀인으로 보았으나 1973년 수정된 이론에서는 일단 일관성이 높다는 전제가 되어야 귀인판단이 가능하다고 봄 - 국내 교수님들 책에는 대부분 수정된 이론이 잘 소개가 안 되어 있고 기존 이론만 수록됨.

08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해설

1990년대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 또는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은 미국의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났던 '관료후려치기'(bureaucrat bashing)라는 행정관료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적 공격에 반발하여, 행정이 스스로 정당성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행정이 사회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윤리 및 규범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운동이다. 행정의 정당성·규범성, 전문직업주의를 강조하고, 행정은 경영이나 정치와 다르다고 보았으며(정치·행정2원론, 공·사행정2원론), 행태주의·실증주의에 반발하고 신공공관리론이나 행정의 경영화에도 부정적 시각이었다.

① (×) 1980년대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불신이나 엽관주의적 요소 도입의 확대에 반발하고 직업공무원제를 옹호

② (○) 스바라(J. H. Svara)는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했다. 즉 효과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션, 정책, 행정, 관리의 네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정부의 미션과 미션 정립에서의 직업공무원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과 행정 간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③④ (×) 정부재구축·민영화·고객중심행정의 신공공관리론의 주장 내용이다. 행정재정립운동은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답 ②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 - 1990년대

1. 의의

① 미국의 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났던 '관료후려치기'(bureaucrat bashing)라는 행정관료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적 공격에 반발하고, 행정이 스스로 정당성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행정이 사회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윤리 및 규범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운동.
'관료후려치기'(bureaucrat bashing)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에 대해 가해지는 강한 비판과 공격을 일컫는 속어로서 월남전 실패, 워커게이트 사건 등 정책의 실패를 연방관료들에게 전가하면서 정치가(닉슨, 레이건 등)들이 이용하였다.

② 특징 : **행정의 정당성·규범성, 전문직업주의 강조. 행정은 경영이나 정치와 다름(정치·행정2원론, 공·사행정2원론). 행태주의·실증주의에 반발, 신공공관리론이나 행정의 경영화에도 부정적 시각.**

2. 연혁

미국 버지니아텍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 웜슬리(G. Wamsley), 굿셀(C. Goodsell), 울프(J. Wolf), 로어(J. Rohr), 화이트(O. White)가 공동선언, 미국행정학회 1983년 연례학술대회에서 소개. Wamsley의 「행정재정립론(Refounding Public Administration, 1990)」을 통해 개념 확대.

3. 내용

① **행태론·실증주의 및 정치·행정이원론 등 탈가치적 학문 조류에 반대 : 규범적 문제가 간과되고 행정의 정당성 규명이 곤란하 므로 행정학의 토대를 국정운영(governance)의 규범성, 특히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를 통해 다시 닦아야 한다.**

② Goodsell의 관료제옹호이론 : 관료제가 민간기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 논쟁의 초점이 되어야 할 점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혹은 정부 역할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의 문제이다.

③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만 닮았으며 행정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행정가는 국정운영과정에서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는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적 외압에 좌절되거나 정치권의 도구로서 다루어지는 이미지를 뛰어넘어 공익추구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의식적인 수탁자(trustee)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진정한 공익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행정가가 긍정적 의미의 권위를 갖추기 위해 **행정가의 규범적 역할**, 특히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를 강조. 전문직업주의 정립을 위해 전문가적인 자질을 입증할 경험, 훈련, 자격증 등만이 아니라 윤리와 규범이 필요하다.

⑥ 삼권분립의 체제에서 행정가의 역할을 시계의 '평형바퀴'(balance wheel)에 비유. 행정가는 공공선의 수탁자로서, 또한 대리인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익을 추구하며 헌법의 의도를 준수할 것 같은 정치체제의 참여자를 찾아 선택적으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때로는 대통령을, 때로는 의회를, 때로는 법원을, 때로는 이익집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헌

미국사회와 정치인의 반관료적 성향에 대응하여 미국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 특히 민영화가 증가하고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의 개념이 국정지표로 선택되어 효율성이 강조되는 반면, 퇴색되어 가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행정(관리와 구별되는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

구 분	관료후려치기의 배경		관료후려치기의 극복방안
논의의 초점	정부역할의 축소	⇨	효과적인 정부의 성격과 역할
기본가정	경영이 생산성에서 우위	⇨	근거 없는 경영 우위론
행정가의 이미지	기능인(technician)	⇨	공익의 수탁자(trustee)
공익정의의 주요수단	가치중립적인 관리기법	⇨	대리인의 관점
삼권분립에서의 위상	의회견제를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	⇨	삼부에 선택적으로 대응하는 균형바퀴(balance wheel)
정치체제의 위상	이익집단 간 경합의 희생양	⇨	민선공직자와 함께 국민을 대변
정치와 행정의 방향	정치행정이원론	⇨	정치행정이원론 또는 행정우위의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연구의 접근방법	실증주의 / 행태주의	⇨	반실증주의 / 규범적 접근

09 민자유치의 사업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BT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민간투자기관이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OT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OO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기간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 BTL방식-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완공 시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여 정부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신 민간투자기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LT방식- 민간의 투자자본으로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며 민간에 임대료를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종료 시점에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해설

㉡ (×) 시설완공Build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Own 직접 운영Operat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BOO

㉢ (×) 민간투자기관이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Build 시설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민간투자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여Operate 투자비를 회수한 다음,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방식 ⇨ BOT

답 ①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② 지방환경청은 특별행정기관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보통지방자치 단체에 속한다.

해설

① (×), ②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특별지방관서라고도 하며 대부분 시·군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예 경찰청의 경찰서,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우정청, 환경부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③ (○)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2. 시, 군, 구
>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구분	지방자치단체 – 자치권, 법인격·당사자능력 있음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 자치권, 법인격·당사자능력 없음
유형 (목적별)	[보통지방자치단체] ① 광역(상급·2차) 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6개), 도(8개), 특별자치도 ② 기초(하급·1차) 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보통지방행정기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및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 가능), 읍·면·동 ■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수행시 지방행정기관의 성격도 지님.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정 사무 수행 예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공기업조합, 미국 특별구(special district)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 사무 수행 예 지방병무청, 지방세무서, 유역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계층	자치계층(광역·기초 2계층 또는 1계층) 예 • 2층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 수원시, 충청남도 부여군 • 단층제(1계층)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계층(2 ~ 4계층) 예 • 2계층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 3계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 4계층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답 ①

11 상황론적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험적 조직이론으로서 관료제이론과 행정 원리론에서 추구한 보편적인 조직원리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다.
② 중범위라는 제한된 수준 내에서 일반성과 규칙성의 발견을 추구한다.
③ 상대적인 입장을 취해 조직설계와 관리방식의 융통성을 피한다.
④ 독립변수나 상황적 조건들을 한정하거나 유형화 하지 않는 유연한 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처방을 추구한다.

해설

①③ (○) 조직이 처한 상황조건에 따라 유효한 조직화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에 관한 조건을 다양한 실증적·과학적 방법으로 연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최선의 원리(the best way)는 없으며 어떤 조직관리 방법도 모든 상황에서 항상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봄(원리접근법 비판). 무모한 획일적 법칙화를 탈피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합한 효과적 방법은 존재한다고 봄.
② (○), ④ (×) 고찰 변수를 특정 환경에서의 적합한 조건으로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조건을 유형화하여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 중범위 이론이다(추상적인 거시적 이론이 아니며, 조직 내부의 집단·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미시적 이론도 아님).

답 ④

12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③ (×) 대통령의 허가 필요.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 공무원노조 전임은 임용권자 동의 필요 / 사실상 노무종사자 노조 전임은 소속장관(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필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답 ③

13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의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urction)에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수혜집단(Advantaged)– 과학자, 퇴역한 군인, 중산층이 대표적이다.
㉡ 경쟁집단(Contender)–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 의존집단(Dependents)–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미지는 긍정적이다.
㉣ 이탈집단(Deviants)– 강력한 제재가 허용되지만 제제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해설

㉣ (×) 이탈집단(Deviants)은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정치적 권력이 약하다. 즉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이므로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고 일반대중들이 이를 용인한다. 또한 정치적 권력이 약하므로 강력한 저항도 하지 못한다.

잉그램과 슈나이더(H. Ingram & A, Schneider)의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 : 공공 정책결정자들이 대상집단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집단과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집단들로 구조화하고, 그러한 구조들을 영속시키고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적 권력이 강하며 긍정적으로 인식되는(즉 투표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수혜집단)에게는 정책목표 달성과 큰 연관이 없어도 혜택위주의 정책이 부여되고, 정치적 권력이 약하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선거로 인한 보복의 위협이 적으며, 일반대중도 처벌에 대해 용인하는) 집단들(이탈집단)에게는 특별한 효과가 없더라도 부담 위주의 정책이 부여된다. 즉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이 정책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제와 정책도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정책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대상을 구체화하고 그들의 권력과 자격을 형성하는 과정은 역동적이며,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한다.

		사회적 이미지(Social Image ; 사회적 형상)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정치적 권력 (Political Power)	강	수혜집단(Advantaged) 예 과학자, 퇴역군인, 노인층	주장집단(Contenders) 예 부유층, 거대노동조합, 소수민족, 문화상류층
	약	의존집단(Dependents) 예 아동, 부녀자, 장애인	이탈집단(Deviants) 예 범죄자, 약물중독자,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 깡패집단

답 ③

14 조직의 분권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공유가 원활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
② 부서 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③ 기술과 환경변화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④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해설

② (×) 부서간 횡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 집권화의 촉진요인이 된다. 부서간 갈등을 계층제적 권위를 활용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집권화와 분권화의 촉진요인

집권화의 촉진요인	분권화의 촉진요인
㉠ 위기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시	㉠ 기술 및 환경 변화의 복잡성·동태성 증가(조직의 적응성 필요)
㉡ 조직활동의 일관성·통일성이 필요한 경우	㉡ 조직이 속한 사회의 민주화 촉진
㉢ 하위조직단위간의 의존도는 높은데 횡적 조정은 어려울 경우(갈등 조정)	㉢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동기유발 전략
㉣ 소규모 조직(구성원 수가 소수), 신설조직(조직의 역사가 짧아 선례가 없어 설립자의 지시에 의존)	㉣ 조직의 쇄신과 개인적 창의성 발휘
㉤ 재정자원의 규모 증대, 중요도가 높은 결정사항	㉤ 조직 참여자에 대한 힘 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 증대	㉥ 조직규모의 확대(대규모 조직-구성원 수 다수)
㉦ 권위주의적 문화	㉦ 구성원의 인적 전문화 및 능력 향상
㉧ 규칙·절차의 합리성·효과성에 대한 신뢰 증가(공식성 증가)	㉧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인 서비스 요청
㉨ 일의 전문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분업의 심화, 기능 분립적 구조설계(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 최고 관리자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장기계획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자 할 때
㉩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집중될 경우(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분권화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하급자·하급기관의 역량·능력 부족	

답 ②

15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해설

① (×) 세입예산은 장(章)이 없다.

• 국가재정법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 ·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 관 · 항으로 구분한다.

예산과목		입법과목				행정과목			
세입예산		기관(소관)		관(款)	항(項)			목(目)	
세출 예산	기존 분류	기관(소관)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세세항	목(目)	세목(細目)
	프로그램예산	기관(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비목	통계비목
분류기준		조직별 분류	기능별 분류		사업별·활동별 분류			품목별 분류	
특 징		신설·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신설·변경시 국회 의결 불필요(행정부 재량)			

답 ①

16 **대리정부(proxy governmen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③ 대리정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④ 시민 개개인의 행동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시민의식 하에 대리 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중요하다.

해설

② (×) 대리정부는 국가의 모든 부분에 속하는 조직이 가진 전략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리정부화가 내세우는 분권화 전략은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가져오는 병폐를 초래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대리정부가 이관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오류를 교정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수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리정부에 대한 재규제(re-regulation)는 새로운 중앙집권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D. F. Kettel의 대리정부이론(행정학의 주요이론. 오석홍 편저)

대리 정부화 현상	①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정부 이외에 다른 대안을 통한 모든 방식(예 민관공동출자를 통한 민관협력방식, contracting-out)을 포함해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토대로 특정 정책의 수행을 제3자 정부가 담당하는 것. ② 단순히 중앙정부가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권을 외부주체에게 이전하거나 외부주체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로부터 대리정부들이 이전받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르는 재원사용권과 공적 권력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권화 현상
이론적 근거	① **분권화이론** : 행정분권화와 정치분권화의 중간적 분권화 형태. 중앙정부가 대리정부에게 정책결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지는 않음 ② **자치정부론** : 비정부주체의 국가운영 참여 확대를한 시민교육과 계몽 중시 ③ **공공선택론** :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되, 집행은 민간주체가 담당하는 작은 정부개념과 생산적 정부론
대리정부의 문제점	① **분권화 전략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남용** : 대리정부는 국가의 모든 부분에 속하는 조직이 가진 전략과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적 정책을 국지적(local) 상황에 맞게 집행할 수 있지만, 대리정부화가 내세우는 분권화 전략은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가져오는 병폐를 초래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대리정부가 이관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오류를 교정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수 있으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리정부에 대한 재규제(re-regulation)는 새로운 중앙집권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정책 관련 정보의 왜곡현상** : 정부와 대리정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의 왜곡현상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③ **중앙정부의 규제적/재집권화 현상** : 대리정부 하에서 나타나는 낭비, 부패, 남용등의 파행은 연방정부의 재집권화 노선 추구의 빌미를 제공.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① **공공서비스 책임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응－중앙정부와 대리정부 간 목표의 상호조정(계약에 각종 유인전략 포함)과 성과에 대한 환류** ② **전문가적 리더십** : 계약관계를 예를 들면 행정관리자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지하고 그 계약의 장래변동사항까지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함. ③ **투철한 시민의식** : 시민 개개인이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때 중앙정부의 목표가치와 대리정부의 목표와 가치에 동일화 될 수 있음

답 ②

17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허(franchise)- 경쟁이 약하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수 있다.
② 바우처(vouching)- 소비자가 재화의 선택권을 갖는다.
③ 보조금(subsidy)- 신축적 인력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④ 자조활동(self-help)- 정부의 서비스 생산업무를 대체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해설

③ (×) 자원봉사방식(volunteers) :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실비)만 보상받고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 신축적 인력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재정제약 시기에 예산삭감에 따른 서비스 수준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예 레크리에이션, 안전모니터링, 복지사업 등 분야에 활용).

답 ③

18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재정법의 개정된 법률 조문을 출제하였다. 2018.3.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대한 주민참여'로 개정하였다.

④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답 ④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법령 규정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시행할 수 있다 x).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실시하여야 한다x).	• 법적 근거 • 의무적 시행 • 주민참여예산기구 • 의견수렴 및 의견서 예산안 첨부(필요적) • 행안부장관이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임의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2020. 4.30. 시행)	제46조(지방예산 편성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반영해야 한다x)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 한다x).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통령령x)로 정한다.	• 참여방법 제시(조례로도 정할 수 있음) • 수렴된 주민 의견 반영(임의적) • 행안부장관의 제도운영 평가는 매년 실시 가능 • 범위·의견수렴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19 공공정책갈등에서 각 프레임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정체성 프레임- 갈등 당사자는 스스로에게 정책의 피해자라는 일정한 특징을 부여하여 자신들을 범주화한다.
② 사회적 통제 프레임-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갈등 해결 당사자들의 인식을 의미한다.
③ 손익 프레임-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에 달려있다.
④ 특징부여 프레임-갈등이슈와 관련된 위협수준과 유형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를 의미한다.

해설

1회성 문제로 보인다. ④는 위험 프레임(risk frames)에 대한 내용이다.

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인식프레임적 접근

1. 인식 프레임의 의미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핵심적 조직화 아이디어로(organizing idea), 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은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법을 정의한다. 따라서 갈등 당사자들의 인식프레임은 현재의 갈등 상황에 대한 정의, 언제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2. 갈등프레임의 유형(심준섭(2012)교수는 6가지로 분류. R. J. Lewicki는 8까지로 분류)

정체성 프레임(identity frames)	갈등당사자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Who am I?) 당사자들이 갈등 상황의 맥락 속에서 '피해자'나 '희생자'등 특정한 정체성을 지님
특징부여 프레임(characterization frames)	갈등상대방이 속한 집단과 구성원을 어떻게 정의(규정)하는가(Who they are?)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사용
갈등관리 프레임(conflict management frames)	갈등관리 방안과 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선호. 갈등 당사자 간 갈등관리 프레임이 유사할수록 갈등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사회적 통제프레임(social control frames)	문제해결주체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이슈들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권력의 정당성과 권력 행사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인식.
위험 프레임(risk frames)	갈등 이슈와 관련된 위험의 유형과 수준에 대한 당사자의 평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여부와 별개로 당사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위험 인식 여부가 결정됨.
손익 프레임(gain vs. loss frames)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에 대한 평가. 위험 프레임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갈등 당사자들은 손실과 이익의 관점에서 프레이밍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반응
상황요약 프레임(whole story frames)	당사자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핵심을 요약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권력 프레임(power frames	권력의 원천에 대한 당사자들의 시각

답 ④

20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해설

* 이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① (×)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④ (○)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 체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2) : 국무총리, 민간위원 중 1인
- 위원 : 관계 장관(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중앙행정기관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정책을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주요현안시책 등을 평가(심층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사무(자치사무) 전반을 스스로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한 평가
		합동평가(원칙)	중앙행정기관장과 행안부장관이 합동으로 평가 행안부장관 소속 합동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개별평가(예외)	업무특성·평가시기상 합동평가 곤란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무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해 실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개별법에 의한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경영성과 평가. 외부기관이 실시(자체평가 없음)

답 ①

21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조직을 개방체제로서파악하는 입장이며, 발전도상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도입되었다.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인접과학의 협동연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인간행태의 의도에 관심을 가진다.
③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에서 공공재의 수요자들 간의 공평한 자원 배분에 관심을 가진다.
④ 역사적 접근방법은 각종 행정제도의 성격과 그 형성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해설

① (○) 생태론은 행정체제를 개방체제로 파악하여 문화·환경적 요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고찰하였다. 문화·환경적 요인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행정을 고찰하여 신생국 낙후 원인을 설명하였다. 문제에서 발전도상국으로 표현하여 함정을 파고 있으나 '설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개도국의 낙후된 현실을 설명하지만 발전비관론적 시각으로 발전·성장을 위한 '처방'은 제시하지 못했다. 환경에 대한 행정의 피동성·종속변수성을 강조하는 환경결정론적 시각이며 행정의 적극성·주체성·자발성·능동성을 경시하였다.

② (×) 행태론이 학제성을 중시한 것은 맞지만 인간의 객관적·외면적 측면인 '표출된 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객관주의·실재론)를 중시하였으며 '의도된 행동(action)'에 관심을 가진 이론(주관주의·유명론)은 현상학이다.

③ (×)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합리적 배분(자원배분의 효율성, 최적 자원배분, 파레토최적)을 강조했지만, 공공재 수요자 간 공평한 자원배분, 즉 사회적 형평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 역사적 접근방법은 각종 행정제도의 성격과 그 형성에 있어서 특수성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정책을 개인선호의 합이나 혹은 행위자들의 갈등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지 않으며, 정책결정과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나 동일한 정책이라도 국가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그 역사적 특수성이 제도의 본질이며,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파악한다.

답 ①

22 총체주의적 예산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집권적이며 하향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식으로 인식한다.
③ 목표와 수단 간 연계관계를 명확히 밝혀 합리적 선택을 모색한다.
④ 연역법적 방법론에 의하며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해설

② (×) 품목별예산제도는 전년도 답습방식의 점증주의 예산제도의 전형적 특징을 지니며 총체주의(합리주의) 예산결정모형과 거리가 멀다.
④ (○) 총체주의의 목표–수단 분석(goals–means analysis)'이다. 목표(가치)와 수단(사실)을 엄격히 구분하여 별개로 파악한다. 목표나 가치는 고정되어 있고, 단일·불변이며, 대안선택 기준도 정해져 있다. 목표를 먼저 확인한 후 수단을 분석(목표의 선행성, 일방향성)하며 목표와 수단 간 상호조정이나 목표의 수정가능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답 ②

23 경합가치모형(CVM: Competing Values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과정모형은 안정성을 강조해 의사소통을중시한다.
② 합리목표모형은 조직의 성장과 자원 확보를 목표로 정보관리와 능률성을 중시한다.
③ 인간관계모형은 조직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사기를 높이는 것을 중시한다.
④ 개방체제모형은 조직유연성과 환경적응성을 중시한다.

해설

② (×) 합리목표 모형은 생산성·능률성·수익을 목표로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를 중시
조직 성장과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방체제모형, 정보관리를 중시하는 것은 내부과정모형.

경쟁적 가치접근법(경합가치접근 ; Competing Values Approach) - 퀸과 로보그(R. Quinne & J. Rohrbaugh)

구조(융통성 vs 통제)

융통성[유연성](flexibility)

초점(focus) 내부vs외부	내부 (조직구성원의 복지·발전)	외부 (조직 자체의 발전)
융통성	인간관계모형(Human Relations Model) • 목표 : 인적 자원 개발, 능력발휘, 구성원 만족 • 수단 : 응집력, 사기	개방체제모형(Open Systems Model) • 목표 : 성장, 자원확보, 환경 적응 • 수단 : 융통성, 용이성, 외부의 평가(support)
통제	내부과정모형(Internal Process Model) • 목표 : 안정·균형, 통제·감독 • 수단 : 정보관리, 의사소통	합리목표모형(Rational Goal Model) • 목표 : 생산성, 능률성, 수익 • 수단 :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통제(control)

답 ②

24 정책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뢰성이 없는 측정은 항상 타당성이 없다.
② 타당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작용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③ 타당성이 있는 측정은 신뢰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④ 신뢰성은 척도 또는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영향을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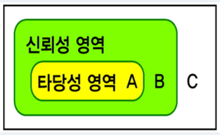
해설

신뢰성 : 측정의 일관성, 타당성 : 측정의 정확성
① (○) 일관성 없는 측정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신뢰성은 타당성 확보의 필요조건(전제조건)이다.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당상은 확보될 수 없다.
② (×)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③ (×) 타당성이 높은 측정은 항상 신뢰도가 높다.
④ (×)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다.

측정·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

• 타당도 : 측정하려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실제와 가깝게 측정했는가에 대한 "목적상 일치도"
• 신뢰도 : 측정도구(시험)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측정수단으로서의 일관성)

㉠ **신뢰성이 낮으면 타당성도 낮다.**– C (신뢰성은 타당성의 필요조건 – 타당성이 확보되려면 최소한 신뢰성은 전제되어야 함).
㉡ **신뢰성이 높다고 항상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A, B (신뢰성은 타당성의 충분조건은 아님).
㉢ 타당성이 높으면 신뢰성도 높다. – A
㉣ 타당성이 낮다고 항상 신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 B, C



구분	A 영역	B 영역	C 영역
타당성	높음	낮음	낮음
신뢰성	높음	높음	낮음

답 ①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실적주의와 조화되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한다.
③ 할당제 등으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은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도 존재한다.

해설

① (○) 전체 사회의 인적구성상 특징과 가치를 반영할 뿐인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F. C. Mosher). 관료가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목표보다 출신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조직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② (×) 사회적 고려를 하며 잠정적으로 일부 사회집단구성원을 우대함으로써 능력과 업적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조하는 실적주의와 충돌될 수 있다. 또한 전문적 능력이 미흡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경우 전문성·능률성을 저해한다.
③ (○) 대표관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처럼 실제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고,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 더 우수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종래에 혜택을 받아오던 집단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 외부통제방식의 보완을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외부통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원들에 의한 통제가 아닌 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일반국민의 참여나 협력적 통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행정·국민주권원리나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배된다.

대표관료제의 특징 구별

대표관료제의 특징인 것	대표관료제의 특징이 아닌 것
대표성·대응성·책임성·민주성	전문성·능률성·생산성, 대내적 민주성 확보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성 윤리와의 조화, 형식적 기회균등
결과의 평등 / 수직적 평등의 확보, 수평적 평등의 저해(역차별) 우려	기회의 평등 / 수평적 평등의 확보, 수직적 평등의 저해, 역차별 방지
내부통제, 비공식적 통제의 방법, 민중통제(외부통제)의 내재화	외부통제, 공식통제의 방법
사회집단의 인구구성비율 반영	공개경쟁채용시험, 선거를 통한 임용, 실적과 능력 중시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와 충돌 가능 적극적 인사행정, 정치적 임용 가능	엽관주의의 폐단 시정, 실적주의의 강화, 실적주의와 양립 불가 정치적 임용 배제,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
집단중심의 사고	개인주의·자유주의의 강화,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를 고려 못함	충원 후 사회화(재사회화·2차 사회화)의 고려

답 ②